

'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란 중인 쟁점은?

'주가 누르기'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행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적용 기준과 방식을 두고 반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1

정부안 입법예고 중

평가기간 최대 6년 6개월 확대 방식, 의견수렴 진행

02

적용 기준 논란

'실효성 제한' 지적과 '과잉 규제' 반론 엇갈림

03

재검토 논의

'왜 주가가 낮아졌나' 중심으로 재설계 예정, 국회 논의 병행

추진에서 재검토 논의까지

- 2026.06.08 대통령의 증시 저평가 지적을 계기로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 논의 본격화
- 2026.07.06 여권, PBR 0.8배 미만 기업 대상 세제 개편 공개 압박
- 2026.07.09 국회 기획재정위 지도부 교체, 연내 처리 동력 확보
- 2026.07.27 금융위원회,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 의견수렴 시행
- 2026.08.04 재정경제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8월 20일 마감)
- 2026.08.05 이훈기 의원 등, PBR 0.8 하한선 방식 의원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접수
- 2026.08.09 정부안 발표 나흘 만에 재검토 보도, 적용 기준 논란 지속

다음 단계

NEXT MILESTONE

8월 20일 의견수렴 마감 후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기준 조정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부안, 각 계의 시각은

증권가

ANALYSTS

PBR 0.8 하한이 빠져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거버넌스포럼

GOVERNANCE

업종별 기준으로는 대상이 약 130곳에 그쳐 저평가 기업에 오히려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론

COUNTERVIEW

주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탈세 기업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25%

- 정부안의 장기 저평가 판정 기준
-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10%
-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해당 시

보도로 본 재검토 방향

판정 기준

'왜 싸졌나' 중심 전환 검토

주주환원

배당·자사주 매입 변화 평가

기업가치 훼손

중복상장·EB 발행 등 반영

점검 및 모니터링 포인트

- 01
 - 기준 재검토·국회 논의 등 최종 방향 모니터링
 - 의견수렴 마감(8월 20일) 후 국회 제출 일정 확인
- 02
 - 자사 PBR 수준, 배당·자사주 매입 등 이력 점검
 - '주가 누르기' 의심 요건 해당 여부 사전 파악
- 03
 - 평가기간 확대 적용 시 세 부담 변화 시뮬레이션
 - 승계 계획 보유 기업은 세무·법무 자문 체계 정비

남은 쟁점

'얼마나 싼가'가 아니라 '왜 싸졌나'를 어떻게 판별할지, 의도적 저평가를 걸러낼 기준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법정책의 변화,
그 흐름을 가장 먼저 읽습니다.

— ISSUE TRACKING

— POLICY INSIGHT

— CUSTOM REPORT

로섹션 입법정책 모니터링

LAWSECTION.AI.KR

본 자료 및 정보는 입법정책 동향 파악을 위한 것으로 공식적인 법률 해석이나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